

## 26년도 사업장 감독계획 관련 브리핑 자료

###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현옥입니다.

2026년도 사업장 감독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감독 물량을 5만 2천 개에서 9만 개로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고,  
지난해 처음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강화하여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과 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장의 노무관리와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감독 방식도 전면 재조정 합니다.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수시·특별감독'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감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금년도 사업장 감독의 주요 내용은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를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노동분야]

우선, 노동 분야는  
예방감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격차 해소를  
위한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절도'인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하겠습니다.

체불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수 감독을 통해  
'숨어 있는 체불'을 적극 찾아내겠습니다.

또한 체불 규모와 고의성,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수시감독과 특별 감독 등을  
순차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서  
포괄 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과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노동자,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대상별 감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여,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간헐적으로 운영하던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금년 2.1일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익명제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업장이나,  
짧은 기간에 급성장하여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과 같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점 감독할 계획입니다.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감독도 확대하겠습니다.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여,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점점하겠습니다.

끝으로, 감독 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감독 결과 확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지방관서 감독부서의 조직을  
'개인 중심'에서 '팀 중심'으로 전환하여  
감독의 균질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을 예방차원에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감독 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확산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동 분야 감독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안전분야]

이어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민재입니다.

산업안전 분야는  
위험의 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감독관 인력을 2,095명까지 증원하여  
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현장 위험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70개 이상의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하여  
벌목과 지붕공사와 같이  
감독관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법 위반 시 단순히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뽑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중심의 점검·감독 유형인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점검·감독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독 이후에도  
위험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실시하여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장 규모와 관리 역량에 따라  
차별화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영세·1인·가족 사업장 등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정보 전달의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도와 기술·재정 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은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여  
안전관리를 바로잡겠습니다.

아울러, 1천명의 '안전일터 지킴이'를 투입하여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현장까지  
촘촘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중·대형 사업장은  
평시에는 유선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관리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끝으로,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띠·안전대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에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예산에 반영된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은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이  
제고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실효적 제재로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